



김비환 교수

한길사/A5신/394면/20,000원



정치의 자율성 역설한 한나 아렌트 연구서

《축복과 저주의 정치사상》 펴낸 김비환 교수

김비환 교수는 이 책에서 아렌트의 정치사상을 통해 정치의 정체성을 복원하려 한다. 아렌트의 정치사상에서 김교수가 주목한 것은 아렌트의 '자각한 패리아' 정신이다. 이는 인간이 정치적으로 존재하지 못할 때 인간성마저 박탈당한다는 것을 깨닫고 여기에 저항하는 힘이다.

김비환 교수(43,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가 한나

아렌트를 처음 만난 것은 1980년대 말이었다. 대학원 재학시절 우연히 《인간의 조건》을 읽으면서 아렌트가 자신이 고민하던 문제에 해답의 실마리를 줄 수도 있다고 느꼈다. 김교수는 인간의 삶에서 '정치의 지위'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아렌트에게 정신적으로 사사했다.

“80년대에 우리 사회는 마르크시즘에 경도됐습니다. 마르크스의 입장을 견지하지 않으면 마치 진보의 대열에서 낙오할 것이라는 조바심이 지식인 사회를 지배했죠. 하지만 마르크시즘은 경제결정론으로 곡해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학의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었죠. 인간의 삶에서 정치를 복원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아렌트를 주목하게 된 거죠.”

기존의 아렌트 해석 비판해

김교수가 이번에 펴낸 《축복과 저주의 정치사상》(한길사)은 아렌트의 삶과 사상을 통해 정치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활시키려는 그의 학문적 열정이 녹아 있는 책이다. 그는 정치가 경제나 종교의 도구와 수단으로 전락할 때 인간성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된다는 점을 아렌트가 간파했다고 말한다.

“정치는 인간성을 표현하기 위한 자유의 공간입니다. 따라서 그것 자체가 독립적인 학문의 지위를 누려야 합니다. 경제발전을 위해 민주화는

유보돼도 좋다는 것이 독재의 논리였다면 아렌트는 인간성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로서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김교수는 이 책에서 기존의 아렌트 해석을 개관하면서 그것이 부분적으로든 전체적으로든 그릇됐다고 비판한다. 아렌트의 정치이론이 초기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계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했다는 것이 김교수의 관점이다. 이런 비판적 해석의 주춧돌로 그가 제시한 것이 아렌트의 '자각한 패리아(pariah)' 정신이다.

“유럽의 반유대주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아렌트에게 패리아(유대성)의 자각은 실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유럽사회에 동화되는 길을 버리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고수합니다. 인간이 정치적으로 존재하지 못할 때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취급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을 정치공동체에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하는 것이 바로 전체주의다. 자각한 패리아로서 아렌트가 온 생애를 마쳐 분석하고 저항하려 한 것이 전체주의였다. 그것은 인간성의 실현 가능성을 총체적으로 부정하는 체제기 때문이다. 아렌트에게 전체주의는 자기를 긍정하고 실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결정적 요인이었다.

“전체주의는 한마디로 다원성과 인간의 자유를 부정하는 체제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바로 인종주의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테러고, 그 목표는 정치공동체의 파괴입니다. 따라

서 인간의 자유를 실현하는 행위공간으로서 공동체성을 복원하는 것이 아렌트의 진정한 의도였습니다.”

자유 원리로 인간의 공존양식 조직화해

다원성에 기반한 자유의 원리로 인간의 공존양식을 조직화하자는 것이 아렌트의 메시지라고 김교수는 역설한다. 김교수는 또한 아렌트의 삶과 사상은 우리 지식인들에게도 경종을 울린다고 말한다. 권위나 이데올로기에 무비판적으로 편승하는 태도를 벗어나 주체적이고 저항적으로 사고하라고 아렌트가 깨우치기 때문이다.

“아렌트는 과거의 지적 전통에 안주하지 않고 자기의 실존적 체험에서 철학적 사유를 정교화시켜갑니다. 전체주의라는 역사적 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전통을 비판하고 새로운 사유의 모험에 나선 거죠. 이런 아렌트의 주체적, 독립적 사고는 권위를 추종하는 현대 지식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김교수는 최근 '부의 분배원리'를 주제로 한글을 마치고 출간을 기다리고 있다. 현실에 밀착한 주제를 선정해 대중의 언어로 풀어갈 것이라는 것이 김교수의 생각이다. 논쟁적으로 현실문제에 접근하되 대립적 입장의 근거를 제시하는 자세를 지켰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공간에서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논의될 때 민주적 공공문화가 형성될 것이라는 신념에 기초해 있다.

— 박천홍 기자